

16-17세기 明·朝鮮 관계의 성격과 조선의 역할

계승범*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그동안 대개 自國史 내지는 一國史 중심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던 한중관계 연구의 틀을 벗어나 동아시아라는 전체 틀에서 明·朝鮮 관계의 실제와 성격을 고찰하고, 특히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 조선이 차지하던 위상의 본질을 설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명에 의해 동아시아 질서가 새롭게 형성된 15세기부터 명·청 교체가 발생한 17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를 다루되, 이른바 明秩序의 존속과 쇠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선의 위상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17세기 이전 명·조선 관계의 실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동시대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 통용되었고, 명·조선 관계에도 실제로 적용된 국제외교 관련 용어들, 이를테면, 朝貢·冊封·來屬·屬國·羈縻·藩國·外國·內服·中外·陪臣 등과 같은 단어들의 용례와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명·조선 관계의 성격이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유교적인 가치로 이념화되면서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가치로 변하는 현상을 유교의 義理 문제와 관련해 분석할 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 당시 동아시아 질서를 명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 시각에서 조망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어도 동아시아 무대에서 조선의 호응이 없는 명질서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명질서가 16세기를 전후한 200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었던 본질적 구조 및 그 질서가 17세기

* 서강대

에 들어와 붕괴되는 이유를 흔히 알려진 후금의 흥기보다는 조선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새롭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런 과거의 경험은 탈냉전시대를 지나 이른바 G2시대를 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사회에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클 것이다.

II. 명과 조선의 외교 관련 용어 분석

명나라(1369-1644)가 주도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조선의 위상은 어떠한가, 명·조선 관계는 피차 어떤 식으로 설정되고 이해되었을까? 이 소절에서는 먼저 관련 용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외교 관련 용어에는 이미 그 관계의 핵심이자 본질이 함축되어 들어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來屬과 羈屬라는 용어를 비롯해 屬國·藩國·外國·內服·中外·陪臣 등, 명·조선 관계에서 많이 쓰인 표현들의 용례와 의미를 살펴보자.

來屬은 말 그대로 “와서 속한다”는 뜻의 述語로, 어떤 특정 전문용어라기보다는 대개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그 용례의 대강을 파악하기 위해 편익상 『조선왕조실록』에서 원문 검색을 해 보면, 100개에 못 미치는 전체 사례 가운데 반 이상이 『세종실록지리지』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읽을 수 있다. 곧 조선 초기(15세기)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屬縣 혁파와 같은 군현의 새로운 획정과 관련해 많이 사용되었다. 나머지 사례들도 대개 내속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 그대로 쓰였다.¹⁾

국제관계와 관련해 사용된 경우는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명에 내속하지 않았다고 풀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속의 결과인 屬國이라는 용례는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왕조에서는 外國을 내속시킨다는 의미와 상통하는 단어로 羈屬라는 표현을 널리 사용했고, 이런 현상은 조선도 마찬

1) 두어 개 예를 들면, 『신조실록』 60권 28년 2월 20일 계해. “... 熙緒曰 當今所陳 非一二事也 以南方之事言之 自其處來者 咽塞不能言 自賊中誘而出者 左道則來屬金太虛 而無糧不能食之 右道則來屬金應瑞 亦無糧不能食之...” 『인조실록』 42권 19년 1월 2일 무인. “戊寅時以逃還者刷送人心海擾 上下教于八道以諭之日... 向化人等自當還歸故國 不願刷送 而亦由累代來屬 昏嫁我民 子支相混 親黨相雜...”

가지여서 실록에서 ‘기미’를 검색하면 그 결과가 매우 많이 나온다. 이렇듯 기미와 내속은 그 의미상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기미의 용례를 통해 내속의 용례를 유추해도 논리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

주지하듯이, 기미라는 단어는 말의 굴레를 뜻하는 羈와 소의 고삐를 뜻하는 縶의 합성어로, 기미의 대상은 대개 外夷나 夷狄이었다. 그 의미는 稱臣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외국의 군주에게는 조공을 허용하고 책봉을 해줌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되, 그런 정도의 관계에서 멈추고 중국 쪽에서 더 이상의 적극적인 관계를 모색하지 않는 정책을 말한다. 이런 의미의 기미정책은 한나라(202BCE-220CE) 때부터 활성화되었으며, 당나라(618-907) 때 羈縶州를 통해 좀 더 강화된 형태로 널리 채택되었고, 명나라 때에도 정책으로서의 기초를 유지했다.²⁾ 즉 기미란 중국 주변의 세력들을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견제하되, 일정한 평화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중국 변경을 침범하지 않도록 무마하는 외교 정책이었던 것이다. 주변국들을 힘으로만 누를 것이 아니라 조공과 무역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나마 허락해 그들의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천자의 질서’를 평화적으로(또는 가장 경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외교 전략이 바로 기미정책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내속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기미는 그 대상이 어디까지나 이적, 곧 중국이 아닌 외국이었다.

중국 것을 많이 모방해 동아시아에서 小中華로 인정받던 조선은 중국의 기미정책도 그대로 수용해 중국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에게 적용했다. 조선이 건국 당시부터 추구한 사대교린 정책에서 교린은 비록 대등한 두 주체의 관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기미정책의 변형이었다.³⁾ 변경을 소요케 하는 女眞이나 倭를 상대로 무력 정벌을 단행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근본 문제인 경제적 욕구를 어느 정도 채워 주기 위해 국경 일대에 몇몇 開市를

2) Lien-sheng Yang, "Historical Notes on the Chinese World Order"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김한규, "한대의 천하사상과 羈縶之義," 『中國의 천하사상』(서울: 민음사, 1988). 한편, 기미와 관련해 가장 널리 인용되는 구절인 "羈縶不絶而已"(『後漢書』 卷25)는 기미의 의미를 잘 함축해 보여준다.

3)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교린관계의 허와 실』(서울: 경인문화사, 2006), 41-76.

실치해 무역을 허락한다거나 上京을 허락해 직첩과 녹봉을 수여하는 등, 중국의 기미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여진과 왜를 대했다. 한·당·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기미는 평화적 관계 유지의 의미로 널리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실제로, 조선시대를 통틀어 기미라는 단어는 “싸우지 않고 평화 관계를 유지함” 또는 “강화”의 의미로 두루 사용되었다.⁴⁾ 따라서 조선이 수용한 기미정책도 그 대상은 조선 영토 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깥의 어떤 존재, 곧 외국이나 외국인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來屬의 일반적 의미는 ‘와서 복속하는’ 모든 행위를 망라하는데, 屬이 국내의 지방 행정구역과 관련해 쓰일 때에는 소속의 변화와 같이 매우 강력한 의미로 쓰였지만, 외교 용어로 쓰일 때에는 그 屬의 의미가 주체성의 상실이나 정치적 병합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았으며, 단지 스스로 와서 稱臣을 할 경우에 그 모든 다양한 사례들을 망라해서 내속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내속한 자 또는 국가들을 內服과 外服, 內藩과 外藩 등으로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었으며, 五服이라는 관념적 질서를 만들어 차별화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다. 결국, 조선이 명에게 來屬했다는 말은 성립할 수 있어도, 그것이 곧 조선이 명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屬國과 藩國의 의미를 살펴보자. 來屬에는 자발적으로 왔음이 강조된 반면에, 속국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군사작전을 통해 강제적으로 속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내속한다는 것은 곧 조공을 바치러 왔다는 뜻인데,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대개 그 반대급부로 책봉을 받았으며, 책봉을 해 준 나라의 屬이나 藩으로 불렸다. 명이나 청(1616-1911)에서는 물론이고 조선에서도 스스로 조선을 가리켜 명이나 청의 屬國이나 藩國으로 부른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이 밖에도 外藩·藩屏·藩屬 등이 조선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외번과 변병이 대개 번국의 의미와 같은 것이라면, 변속은 번국과 속국을 합쳐 부른 용어

4) 『조선왕조실록』에서 사례를 무수히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몇 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 88권 22년 1월 10일 계축; 『연산군일기』 28권 3년 11월 2일 기해; 『광해군일기』 147권 11년 12월 22일 신미 및 29일 무인; 『인조실록』 16권 5년 4월 1일 정유 외 다수.

이다. 이런 용어들은 모두 조선이 국제무대에서 명이나 청과 맺은 관계가 대등하지 못했음과 증원의 제국(책봉국)을 중심으로 짜인 국제질서에 하부단위로 참여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명이나 청에게 정치적·영토적 주권을 상실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명나라 사람과 조선 사람 모두 조선을 外國으로 인식한⁵⁾ 사실은 그 좋은 예다.

한편, 18세기에 편찬된 『明史』에서 조선을 ‘외국’으로 분류한 것과는 달리, 1920년대에 초고가 일단락 된 『淸史稿』에서는 조선을 ‘속국’으로 분류했다.⁶⁾ 이는 조선의 위상이 명·조선 관계에서보다 청·조선 관계에서 더 격하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1920년대 당시에는 중화민국의 지식인들이 이미 서양의 萬國公法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만국공법의 ‘vassal state’를 기존에 이미 널리 쓰이던 屬國이라는 말로 문자적으로 번역해 이해한 결과였을 뿐이다.⁷⁾ 다른 말로, 이전부터 널리 쓰이던 속국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아편전쟁(1839-1842) 이후 만국공법이 널리 유통됨에 따라, 또한 1882년 이후 청나라가 조선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서양 개념의 vassal state로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사용한 결과였던 것이다. 오히려, 18세기에 편찬된 『명사』에 조선이 외국으로 분류된 이유는 당시 청에서 조선을 외국으로 보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며, 1920년대에 급조된 『청사고』에서 조선이 속국으로 분류된 것은 당시 중화민국의 지식인들이 과거의 조선을 그렇게 소급해서 이해했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만국공법 이전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 쓰이던 속국의 의미가 서양의 근대 개념으로서의 vassal state와 같다고는 결코 볼 수 없다. 실제로, 개항(1876) 이전의 청나라 사람들은 조선을 외국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5) 조선 전기와 후기를 막론하고 왕조실록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들은 매우 많은데, 그 가운데 일부를 전거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종실록』 24년 10월 18일 경진, 26일 무자, 27일 기축; 37년 11월 24일 경오; 『숙종실록』 35권 27년 3월 29일 병진; 『경종수정실록』 3권 2년 3월 26일 신해; 『영조실록』 1권 즉위년 9월 1일 신축 등.

6) 최소자, 『淸과 朝鮮 근대 동아시아의 상호 인식』(서울: 혜안, 2005), 180-183.

7) 개항 이후 청의 내정 간섭 시기에 속국의 개념과 관련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된 조공과 책봉의 성격에 대한 연구사 정리로는 구선희, “근대 한중관계사의 연구경향과 쟁점 분석,”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참조.

이런 번역상의 문제, 특히 영어의 漢譯 문제로 인해, 속국의 뜻을 파악할 때 영어 용어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속국을 가리키는 용어로 영어권 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tributary state이고 다른 하나는 vassal state이다. Tributary state가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쓰이던 속국의 의미를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이해해 그에 맞게 의역한 결과라면, vassal state는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 쓰이던 속국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자적으로 직역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근대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이전 시기로 올라갈수록 vassal state라는 표현이 대세였으나, 지금은 tributary state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서양의 vassal state의 경우, sovereign state(주권국; 전근대 동아시아라면 책봉국)는 vassal state에 대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되, vassal state로부터는 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간다. 그러므로 비록 문자적으로는 vassal state를 속국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동아시아 문명권의 속국과는 그 의미가 많이 다르다. 특히 중국의 왕조가 책봉조공 체제를 유지한 일차 목적이 조공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은 아니었으므로, 역사 전문용어인 속국을 vassal state라고 직역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라 할 수 없다.

한편, tributary state는 말 그대로 tribute(조공)을 바치는 나라라는 뜻으로, 조공국을 뜻한다. 그런데 ‘조공국’은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용어로, 구미 학자들이 속국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헤로도토스(Herodotus)의 『역사(The Histories)』에서 차용해 만들어낸 학술용어이다. 어쨌든, 전근대 동아시아에서는 이 조공의 반대급부가 대개의 경우 책봉이었으므로, 조공과 책봉이 제대로 유지되는 한, 책봉국은 조공국의 내정에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었다. 명과 청에서도 이런 나라들은 모두 외국으로 분류했다. 전략적 차원에서 중원의 울타리가 되는 번국, 곧 변경 지대에 위치한 외국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조공국의 국제적 위상은 근대 서양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점이 바로 서구 학자들이 예전에는 동아시아의 번국과 속국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vassal state로 이해하고 실제로 그렇게 번역해 사용하다가, 20세기 말부터 점차 tributary state라는 말로 바꾸어 쓰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현대 국제사회에서도 수시로 일어나는 내정간섭을 기준으로 삼아 어떤 나라가 주권국인지 주권국이 아닌지 판단하고자 했던 기존의 연구 태도는 지나치게 평면적인 양단논리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⁸⁾ 서양 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 중국의 역사기록에 보이는 속국이나 번국을 각기 독자적 권력체계와 영토주권을 갖춘 외국, 곧 주권국으로 보지 않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이른바 明秩序가 절정에 달했던 16세기에 조선과 명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새로운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한 예로 內服을 꼽을 수 있다. 조명관계와 관련해 내복이라는 용어의 용례를 『조선왕조실록』에서 원문 검색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명 조정에서 조선이 명의 내복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인지하면서도 조선을 내복과 비슷한 처지의 나라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은 16세기 전반 嘉靖帝(r. 1521-1566)와 中宗(r. 1506-1544) 사이에서 처음 등장한다. 중종 이전 시기에서는 사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중종 이후로는 빈번히 등장한다.⁹⁾ 이점은 16세기 전반 중종 대에 명·조선 관계 내지는 상호인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내복은 外服의 상대 개념으로, 중국 왕조의 통치력이 직접 미치는 지역, 곧 중국의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조선이 만일 명의 내복이 되었다면, 이는 조선의 정치적·영토적 주권의 상실로 이해될 수도 있다. 물론 16세기 전반 명과 조선에서 조선을 명의 내복으로 간주한 것은 “내복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대우한다”는 의미였지만, 이런 새로운 대우만으로도 기존의 명·조선 관계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명질서에서 조선이 갖는 위상의 해석을 놓고 허다한 논쟁이 중종 대 조정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진 점도¹⁰⁾ 이때 명·조선 관계에 무엇인가 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음

8) 계승범, “조선시대 동아시아 질서와 한중관계: 쟁점별 분석과 이해,”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135-139.

9) 계승범, “과병 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對明關係의 변화,” 『大東文化研究』 제53호(2006). 물론, 실록 이외의 자료에서 내복의 15세기 용례가 일부 발견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다만 그럴 지라도, 16세기 전반 중종 대가 내복의 용례와 관련해 중요한 전환기였음은 분명하다.

10) 구도영, “중종대 사대인식의 변화: 大禮議에 대한 別行 과전 논의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

을 강하게 시사해준다.

실제로, 조선의 중종은 명의 가정제로부터 내복으로 대우를 받아, 명 내부 지역의 장관들을 상대로 반포되는 詔誥의 대상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¹¹⁾ 이런 조치를 중종이 크게 환영한 반면에, 조정 신료들은 폐습이 될 것이라면서 대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렇지만 사대의 정성을 지극히 해야 한다는 중종의 뜻을 꺾을 마땅한 길이 없어, 논의의 흐름은 대체로 중종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결과적으로, 중종 대에는 명 황실 내부의 시시콜콜한 일까지도 공식 절차를 밟아 조선에 통보되는 바람에, 특별 進賀使나 陳慰使 파견 여부를 놓고 벌어진 논쟁이 거의 그칠 날이 없을 정도였다.¹²⁾

이런 상황은 급기야 명 황제가 조칙을 반포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天下와 中外에 알린다”는 표현에서 천하와 중외에 외국인 조선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명에서 말하는 중외에 조선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 조선이 갖는 위치와 조명관계의 실상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 크다. 신료들이 대개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견지한 반면, 중종은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그 유권해석을 명의 예부에 문의하기에 이르렀는데, 사행사가 북경에서 예부에

어제 聖旨에서 ‘중외에 칙서를 내리라’고 했는데, 본국에도 칙서를 내립니까, 아닙니까?

라고 문의했을 때, 예부에서는

실』 제62호(2006); Seung B. Kye, “Huddling under the Imperial Umbrella: A Korean Approach to Ming China in the Early 1500s,” *Journal of Korean Studies*(2010) Vol. 15, No. 1.

11) 『중종실록』 36년 10월 7일 기미. “下于政院曰 前者僉用卿 奏謂中朝 請以朝鮮依內服例 凡有詔告天下之事 皆通諭 故今者加上尊諡及昭聖皇后遺詔 自遼東騰黃送來 其遺詔中 有中外臣民之家 不去音樂 宗室諸王 各免赴喪 但遣人進香云 以此觀之 則外國可以進香 …” 이점은 중종 대까지의 조명관계를 약술한 『朝鮮編圖說』에서도 확인된다. 『輿期陽雜著』 5:7左, (南京: 國學圖書館陶風樓, 1932). “… 國主嗣立則 使者往封 有大事則 頒詔於其國 他國不敢望也.”

12)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서울: 푸른역사, 2009), 123-139.

소위 중외란 외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니, 당신 나라에는 칙서를 내리지 않을 것이오.

라고 하여, 중외에 조선, 곧 외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¹³⁾ 이는 당시 명에서 내복의 예에 따라 모든 조칙을 조선에도 전하게 했을지라도, 그 자체가 매우 예외적인 조치였고, 조선을 외국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의 태도였다. 그런 당연한 사안을 굳이 북경에까지 가지고 가서 예부에 유권해석을 품의할 정도로 당시 조선의 국왕을 포함한 지배엘리트들의 명나라 인식은 보다 의존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Ⅲ. 16세기 명·조선 관계의 절대적 성격

명질서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16세기 명·조선 관계의 본질은 유교에서 말하는 義 곧 의리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보다 공고해졌다. 조선이 속했던 유교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의는 대개 春秋義理를 가리키는데, 춘추의리란 바로 천명을 받은 정통국가 곧 주나라 왕실에 대해 신하(제후)로서 의리를 지키는 것을 뜻했다. 조선의 성리학이 16세기에 발전하면서 이런 춘추의리는 곧 천자가 임재한 북경의 명 조정을 天朝라 칭하면서 명·조선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명에 대한 사대를 국시의 하나로 삼아 출범한 조선왕조에서 춘추의리는 천자가 주재하는 중화질서에 순응해 참여함을 뜻했다. 다른 말로, 조선왕조의 레종데트르는 명에 사대함으로써 중화질서를 따르고, 보편적 중화문명인 유교의 가치를 수용하고 따르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조선사회에서 회자된 의 개념은 당연히 오륜 가운데 하나인 君臣有義와 직결된다. 그런데 오륜은 곧 강상의 인륜이자 천륜이므로, 유학자

13) 『중종실록』 37년 11월 24일 경오. “書狀… 臣等問曰 昨聖旨 降勅中外 於本國亦降勅否 (禮部) 答曰 所云中外者 非指外國也 爾國則不應降勅云 …”

라면 그 의리의 실천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상위에 두는 것이 기본이었다. 물론 유학자의 본분으로는 불의에 비분강개하는 義 외에도 온화하고 어짊을 추구하는 仁이 있지만, 현실에서 불의한 세력(난신적자)에 의해 군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인의 포용적 온화함보다는 의의 준엄함을 밝히는 데 더 철저했다.¹⁴⁾ 종묘사직의 위기가 국내 정치의 타락으로 인해 발생했을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하는 出處之辨의 의리로 나타나지만, 그 위기가 중화질서를 위협하는 외침으로 인해 발생했을 때에는 스스로 군사를 일으켜 춘추의 尊王攘夷 차원에서 勤王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춘추의리는 자국의 입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천명을 받아 천자가 관할하는 중화질서”라는 보다 상위의 틀에서 사용되었다. 이런 의리를 실천한 대표적인 예는 임진왜란(1592-1598) 때의 의병 활동인데, 의병장들은 거병의 궁극적 목표를 단지 조선 내부의 군왕에만 두지 않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편적 중화질서의 수호에도 두고 있었다.¹⁵⁾

실제로, 임진왜란 중에 등장한 의병에서 義가 뜻하는 바는 조선이라는 범주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였다. 전쟁 초기의 급박한 상황에서 의병을 모집하는 임무를 맡은 金誠—(1538-1593)은 영남지역의 士民에게 호소한 글에서 군왕이 변란을 맞은 위기 상황에서 자기 살 길만 찾느라 절의를 행하지 않을 때 발생할 결과에 대해

…(그런 즉) 구차하게 세상을 살면서는 장차 어찌 머리로 하늘을 일 것이며, 죽어 지하에 들어가서는 또한 어찌 우리 先正臣들을 뵈 것인가? 의관과 예악의 (법도를 지닌) 몸을 욕되게 할 수 있겠는가? 단발하고 문신하는 습속을 따를 수 있겠는가? 200년 종묘사직을 적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수천 리 산하를 적의 소굴로 맡기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중화가 바뀌어 오랑캐가 되고 인류가 변해 금수가 되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¹⁶⁾

14) 금장태, 『한국의 선비와 선비정신』(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63-64.

15) 계승범, “조선시대 의병의 개념과 임진의병,” 『西江人文論叢』 제33호(2012).

라고 열거함으로써, 충의의 실천과 근왕의 목표가 단순히 조선이라는 강토의 수복에만 있지 않고, 華夷之辨의 의리에 입각한 보편적 중화문화를 수호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의병장으로 잘 알려진 趙憲(1544-1592)이 말한 의리도 중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조헌은 한 상소문에서 군사력을 앞세워 중화질서를 위협하려는 豊臣秀吉은 불의하게 찬탈한 자이므로 조선의 군왕은 그와 교류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 우리 중화의 도리를 밝혀 저들의 오랑캐 성품을 막고, 군왕을 친근히 하고 뒷사람을 위해 죽을 우리 백성을 거느리고 (나아가), 통솔도 안 되고 군왕도 없는 저들 무리를 매질해야 합니다. …17)

라고 하여, 중화와 이적을 분별하는 의리를 준엄하게 역설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일본이 征明假道를 요구하는 서신을 조선에 보내왔을 때에도 상소를 올려

… 신이 가만히 오늘의 일을 생각해 보니, 안위와 성패가 그저 호흠지간에 있어 진실로 평안하지 않은 때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건대, 빨리 오랑캐 사신의 목을 베어 나는 듯 (달려가) 天朝에 아뢰고, 적의 사지를 찢어서 琉球와 여러 나라에 나누어 보내 온 천하로 하여금 함께 분노하게 함으로써 이 적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 당장 힘 쓸) 한 가지 일입니다. …18)

-
- 16) 『鶴峯先生文集』 권3 「招諭一道士民文」. “… 則偷生世間 將何以頭戴一天 死入一本之死地下 亦何以見我先正 衣冠禮樂之身 其可辱乎 斷髮文身之俗 其可從乎 二百年宗社 其忍輸之賊手乎 數千里山河 其忍委之賊窟乎 中夏變爲夷狄. 人類化爲禽獸. 是可忍乎. 是可爲乎 …”
- 17) 『重峯先生文集』 권6 『請絕倭使疏』(丁亥十一月公州提督時). “… 明吾華夏之道 格彼蠻髦之性 率吾親君死上之民 撻彼不率無君之類 …”
- 18) 『重峯先生文集』 권8 「請斬倭使疏」. “… 臣竊料今日之事. 安危成敗. 只在呼吸之間. 眞可謂不寧之時矣. 惟有亟斬虜使. 飛奏天朝. 分致虜虜于琉球藩國. 期使天下同怒. 以備此賊一事. …”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보면, 조헌이 강조한 의 개념은 조선 내부에서만 봐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명이 주도하는 중화질서라는 틀에서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의병을 모아 거병한 궁극적인 동기 또한 그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듯, 조선시대에 쓰인 의병의 의미는 보편적 유교문명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 조선시대에 두루 사용된 의병이란 국내적으로는 왕조의 우두머리인 군왕이 외적의 침입을 포함한 여러 국내외 난신적자들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향한 충의를 실천하기 위해 신민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조선이 속했던 국제질서 차원에서 보면, 충의의 최종 대상은 북경에 자리를 잡은 한족 천자, 곧 명 황제였던 것이다. 왜란 때의 의병이 조선에서만 아니라 명에 서도 의병으로 불릴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명·조선 관계와 관련해 발생한 이런 보편적 의리 인식은 16세기에 명의 전성기가 계속됨과 함께 조선 내부에서 발생한 성리학의 융성에 힘입어 그 체계를 굳혀갔다. 16세기를 대표하는 두 학자 李滉(1501~1570)과 李珥(1536~1584)의 생각은 이를 잘 대변한다. 이황은 일본에 보내는 예조의 국서를 작성하면서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의 없소 춘추의 大一統이라는 것은 곧 천지의 常法이고, 고금에 통하는 의리요. 大明이 천하의 중주국이 되니, 바다 한 구석 해 뜨는 곳 (조선에서는) 신복하지 않은 적이 없소. 능히 이런 (원칙을) 실행함은 우리나라가 中朝에 사대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19)

라고 하여, 조선이 지켜야 할 의리의 대상이 명 황제 곧 천자임을 분명히 했다. 이이도 조공 문제를 논하는 중에

…신이 듣건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길 때 편안하고 위험함

19) 『退溪全書』 8, 「禮禮答日本國左武衛將軍源義清」 “…天無二日 民無二王 春秋大一統者 乃天地之常經 古今之通義也 大明爲天下宗主 海隅出日 罔不臣服 能行此者 惟我國家之事 中朝 是也…”

(따라) 마음을 바꿔서는 안 되고, 성하고 쇠함에 (따라) 예를 폐해서도 안 됩니다. 능히 이런 (원칙을) 실행함은 우리나라가 中朝에 사대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 지금 (중조와는) 以小事大로써 군신의 분수가 이미 정해졌으므로, 시세의 곤란함과 용이함을 헤아리거나 이해관계에 거리낌이 없이 정성을 다하는 데 힘을 씁니다. …²⁰⁾

라고 하여, 조선이 유일의 천자국이자 중화국인 명에 대해 갖추는 사대의 예를 상황을 초월해 지켜야 할 보편적 절대가치로 규정했다.

이로써 볼 때, 이황과 이이의 제자들인 조선의 사대부들이 왜란이라는 국난을 맞아 일으킨 의병에서 의가 뜻한 바도 바로 이런 동아시아 질서, 곧 유교적 천하 질서라는 상위의 틀에서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왜란 중의 의병은 조선왕조가 춘추의리에 기초한 중화질서와 중화문명권의 일원이라는 보편적 세계관과 문명관에 기초해 사용되었던 것이다. 임진왜란 때 명의 군사 개입을 계기로 형성된 再造之恩 이데올로기가²¹⁾ 그렇게 급속하게 조선 지배엘리트 사이에 번질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강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건국과 동시에 조정에서 스스로 圜丘壇의 天祭를 폐지하고 그 후에도 천제를 참람한 것이라 하여 1897년까지 일절 재개하지 않은 점이나,²²⁾ 1607년에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조선인 포로의 쇠환을 요구하는 국서의 초안을 작성하면서

… 우리 백성은 바로 천자의 赤子이니 고국으로 쇠환시켜 자기 그들의 생업에 편안히 종사케 하는 것이 진실로 교린의 도리라는 내용으로 만든다면 사리에도 편할 것이다. …²³⁾

20) 『栗谷全書』 拾遺 4, 「貢路策」, “… 臣聞下之事上。不以夷險而易其心。不以盛衰而廢其禮。能行此者。惟我國家之事中朝。是也。… 今夫以小事大。君臣之分已定。則不度時之艱易。不揣勢之利害。務盡其誠而已。…”

21)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서울: 역사비평사, 1999), 67-88.

22) 계승범,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225-230. 세조(r. 1455-1468) 때의 환구단 천제가 유일한 예외이다.

라고 하여, 조선의 인민을 천자의 자식이라 표현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후금을 치기 위한 명의 파병 요청을 거부하려는 광해군(r. 1608-1623)의 면전에서 비변사 당상관들이

… 전하에게 득죄할지언정 천조에는 득죄할 수 없습니다.…²⁴⁾

리는 말을 버적이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조선의 군왕이 북경의 天朝를 중심으로 구축된 중화질서에서 천자의 하위에 속한다는 유교적 천하의식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보편적 중화질서와 그에 따른 의리 개념의 보편성과 절대성은 조선시대에 조선의 양반엘리트들이 명의 황제를 상대로는 자신을 陪臣으로 자랑스럽게 칭했지만, 청나라 황제를 상대로는 자기를 배신으로 칭하지 않은 극명한 사례를²⁵⁾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19세기 후반을 풍미한 衛正斥邪 운동에서 正이 진정으로 의미한 바가 조국이니 민족이니 하는 근대국민국가 개념이 아니라 중화에 바탕을 둔 보편적 유교문명이었던 점도 바로 이런 오랜 역사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조명관계와 관련해 발생한 변화는 이황과 이이가 조선의 對明事大를 조정이 가능한 하나의 외교노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가치로 보았듯이, 16세기 후반에 이미 확고하게 굳어졌다. 이런 변화상은 명과 조선의 관계를 군신관계로 보던 기존의 인식에 더해 부자관계가 새롭게 추가된 점에서도 극명하게 두드러진다. 유교와 사대를 새 왕조의 양대 근간으로 천명

23) 『선조실록』 207권 40년 1월 4일 무진. “備忘記曰 … 吾民即天子之赤子, 刷還于鄉國, 使之各安其業, 此固交隣之道也.” 以此措辭, 事理順便 …”

24)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129, 10년 6월 20일 정축. “… 與其得罪於天朝 寧得罪於聖明 …”

25) 계승범, “조선 후기 중화론의 이면과 그 유산: 명·청 관련 호칭의 변화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제19호(2009), 59-61. ‘배신’이란 천자의 책봉을 받은 제후를 섬기는 신하라는 뜻으로, 조선의 신하는 곧 천자의 신하임을 의미한다. 이런 용어가 널리 사용된 점은 명이 주도하던 ‘중국적 질서’ 안에서 엄존하던 보편적 위계질서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배신이라는 용어가 청의 황제를 상대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점은 조선의 양반사대부들이 마음속으로 만주족 황제를 천자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하고 출범한 조선왕조에서 그 둘이 군신(충)과 부자(효)라는 유교적 가치에 기초해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된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했다. 조선의 지배엘리트들이 명을 부모의 나라로 인식한 것은 임진왜란 이전의 일로, 16세기 전반 중종대부터 이미 조야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 의식은 임진왜란 때 등장한 再造之恩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조선의 조야에 팽배했다.²⁶⁾

이런 변화는 매우 중요한데, 군신관계와 부자관계는 그 가치의 절대성과 지속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군신관계는 정세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이지만, 인류에 기초한 부자관계는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 관계, 곧 절대가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유교 이념에 바탕을 두었을지라도, 군신관계와 부자관계는 그 의미에서 크나큰 차이가 있다. 맹자가 명시했듯이, 신하들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군주가 거듭 道를 저버린다면, 신하는 조용히 그 군주를 버리고 떠나거나 아예 새로운 군주를 세울 수 있었다. 반면에, 부모는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자식이 그 부모를 바꾸거나 저버릴 수 없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는 없다”는 중국 宋代 名儒의 말이 유교사회인 조선에서 횡횡한 이유였다.²⁷⁾ 또한 “부모가 자애로운데 효도하는 것은 평상적인 일이지 (그것을) 효도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며, 부모가 자애롭지 않은데도 효도해야 자식이 효를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송대 名宦의 말이 조선에서 즐겨 인용된²⁸⁾ 까닭도 바로 이런 점에 있었다. 또한 그런 중국의 예가 조선의 조정 논의에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논의된 이유도 바로 조선이 그런 유교적 중화 질서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가치가 상대성을 잃고 절대성만 가질 경우, 그 가치는 상황을 초월하며, 따라서 상황논리로 조정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부자관계(효)가 倫紀·彞倫·天倫

26)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서울: 푸른역사, 2009), 216-219.

27) 한 예로, 『광해군일기』 72권 5년 11월 10일 갑자. 한편 이 말은 송나라 때 이름난 유학자인 羅從彦(1072-1135)이 한 말이다. 『豫章學案』, 『宋元學案』 序 1a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3) 참조.

28) 한 예로, 『광해군일기』 88권 7년 3월 25일 신미. 한편, 이 말은 송나라 英宗(1023-1064)이 태후를 상대로 불만을 토로했을 때, 재상 韓琦가 효도를 잃지 말라는 뜻으로 간한 말이다. 『宋史』 312, 列傳 71, 韓琦 (臺北 鼎文書局, 1991), 10226쪽.

등으로 설명되는 이유이며, 유교정치의 근간이 以孝理國 곧 ‘효의 정치’라는 말로 요약되는 까닭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원문 검색 기능에서 이효이국, 以孝爲治, 率一國以孝 등의 구절로 찾아보면, 이런 표현들이 대개 성종(r. 1469-1494) 대와 중종(r. 1506-1544) 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흥미로운 현상을 읽을 수 있다. 요컨대 군신관계가 일종의 상대적 가치에 기초한 계약적 관계라면, 부자관계는 절대적 가치에 기초한 영원한 관계였던 셈이다. 또한 그런 가시적 변화가 발생한 시기가 바로 16세기 전반 무렵이었던 것이다.²⁹⁾

요컨대, 군신관계 하에서는 고려의 지배엘리트들이 그랬듯이 중주국이 망할 경우 天命이 옮겨갔다는 구실로 내세워 얼마든지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으나, 부자관계 하에서는 그런 융통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명·청 교체기를 맞아 조선의 양반엘리트들이 이전 고려왕조의 현실적인 외교노선을 따르지 않고 명에 대한 의리에 집착한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병자호란(1636-1637) 이후 청이 새롭게 주도하는 국제질서 하에서도 조선이 여전히 명에 대한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역사적 배경도 이런 문제에 닿아 있었다. 결국, 이런 춘추의리 의식으로 무장한 조선의 사대부들이었기에, 그들은 명·청 교체를 천명의 교체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명 자체의 붕괴, 곧 천자의 상실이자 중화의 몰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IV. 明秩序의 성쇠와 조선의 역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념적·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핀 명·조선 관계는 현실의 국제무대에서 어떻게 작용했을까? 이념이라는 외피를 벗겨버렸을 때 조선에게 명질서란 어떤 것이었을까? 명은 조선에게 얼마나 중요한 외국이었을까? 조선은 명이 주도한 제국질서에 단지 수동적으로만 참여했을까? 그 둘의 관계에서 명은 항상 ‘갑’이고 조선은 늘 ‘을’이었을까?

명질서가 200년이 넘도록 동아시아 권역에서 튼튼하게 유지된 데에는 조선의

29) 계승범, “과병 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對明觀의 변화,” 『大東文化研究』 제53호(2006).

호응과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두 손이 호응을 해야 손뼉을 칠 수 있듯이, 조선의 호응이 없는 명질서는 사실상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또한, ‘천자의 은덕’이 직접 미치지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교화는 천자의 책봉을 받은 조선의 왕이 독자적으로 담당했다. 쓰시마를 포함해 일본열도의 서부에서 반독립적 지위를 유지하던 다이묘(大名)들과 만주일대에 퍼져있던 여진족 추장들을 상대로 한 조선의 정책은 ‘朝鮮秩序’라고 불릴만한 미니(mini) 조공책봉 체제가³⁰⁾ 명질서라는 전체 틀 안에 하위구조로 병존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렇듯 공고하게 구축된 명질서, 곧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second-to-China’라는 2인자의 위치를 점하던 조선으로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명질서를 즐기는 데에 더욱 익숙해졌으며, 따라서 명·청 교체기를 맞아 단지 이념적인 문제를 넘어 현실적으로도 명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절실했다. 이 또한 명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선의 중요성이 구조적으로 지대했음을 뜻한다. 그런데 당시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 조선이 갖고 있던 이런 지정학적 위상은 마치 동전의 앞뒤와도 같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조선의 태도 여하에 따라 명질서는 튼튼하게 유지될 수도 있고,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제무대에서 명과 조선의 공조가 절정을 이루었던 임진왜란(1592-1598)과 그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요동전쟁(1618-1622)의³¹⁾ 성

30) Kenneth R. Robinson, “Centering the King of Chosŏn: Aspects of Korean Maritime Diplomacy, 1392-1592,” *Journal of Asian Studies*(2000) Vol. 59, No. 1.

31) ‘요동전쟁’이란 1618년부터 1622년까지 전개된 후금의 요동 장악 과정을 한 시기로 묶기 위해 필자가 만든 용어이다. 후금의 요동 장악은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만, 아직까지 이 전쟁 과정을 특별히 가리키는 용어가 없어 불편했다. 대개 입관전이라는 큰 시기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명·조선의 후금 원정이 참패로 끝나는 사르후(薩爾滸) 전투(1619)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요동을 둘러싼 전쟁이 5년간 지속된 점, 이 기간 중에 벌어진 술한 전투들 가운데 하나인 사르후 전투가 이 5년간의 시기를 총괄하여 대표할 수 없는 점, 1623년부터 후금이 잠시 팽창을 멈춘 점, 이후의 전투는 대개 요서 지역에서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17세기 전반 후금의 요동 장악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 과정을 ‘요동전쟁’이라 불러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조선 입장에서 보아도, 광해군 대를 수놓은 치열한 외교노선 논쟁은 바로 이 ‘요동전쟁’ 기간 동안에 집중된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계승범, 2011. 『鄕通事 河世國과 조선의 선택: 16-17세기 한

격을 조선의 입장을 중시하되 동아시아 차원에서 비교할 때 잘 드러난다. 두 전쟁 모두 주변국이 중앙(center)인 명나라를 상대로 벌인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전쟁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먼저 조선이 처한 지정학적 요인에 기인한다.

우선 지리적으로 볼 때, 일본이 명을 치기 위해서는 조선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비해, 후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달랐다. 이는 전쟁 상황에 처한 조선 조정이 취할 대외정책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조선을 침입한 일본을 상대로 조선이 취할 선택의 폭은 매우 좁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명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해서 일본에 대항해 싸우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비록 도중에 일본과의 평화협상 여부 및 그 내용을 놓고 조정 신료들 사이에 일부 의견 차이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국론의 분열에까지 이르는 수준은 전혀 아니었다.

반면에, 후금은 상황에 따라서는 조선을 침입하지 않고도 곧장 중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후금을 상대로 조선 조정이 행사할 수 있는 외교 카드 선택의 폭은 이전에 비해 훨씬 넓어졌고, 그만큼 조정의 의견도 분분해져 논쟁으로 발전될 소지가 다분하였다. 이런 사정은 조선의 태도 여하가 기존 동아시아 명질서의 존속 여부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정치·외교적으로 보아도 두 전쟁은 성격이 매우 달랐다. 임진왜란의 경우에, 조선은 명과 거의 모든 면에서 시종일관 공조를 취하는 형국이었다. 평화협상 과정 및 전투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두 나라 사이에 차이는 있었지만, 그런 차이가 두 나라의 긴밀한 공조를 위협할 정도는 전혀 아니었다. 일본이 명과 조선의 공동의 적이라는 사실이 매우 분명한 전쟁이었으므로, 일본을 대하는 조선 조정의 태도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반면에, 후금은 조선의 태도 여하에 따라 명과 조선의 공동의 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달랐다. 따라서 굳이 명을 위해 후금을 적으로 삼을

女眞語 통역관의 삶과 죽음, 『만주연구』 제11호 참조.

필요가 없다는 논의가 조선 조정에서 제기될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조선이 명과의 공조에서 벗어나 후금을 상대로 독자적인 정책을 펼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한 사실은 이미 그 자체로 명과 조선을 축으로 한 동북아 국제질서에 변화를 불러온다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³²⁾ 또한 이런 상황은 조선의 지배엘리트들이 앞서 다룬 조명관계의 이념적 속성과 현실적 특성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후금에 대해 광해군(ᄡᆞ, 1608-1623)이 취한 우호적 태도는 후금의 흥기로 인해 종래의 명·조선 공조체계가 어떻게 삐걱거리게 되었는지, 또한 그로 인해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인 명질서에 어떻게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 잘 보여준다. 명이 동북아의 명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선의 역할은 지대했다. 명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과 정치·문화적으로 밀착함으로써 조선의 중원 침공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이점이 있었다. 이 외에도, 자타가 소중화로 인정하는 조선이 한반도에 위치함으로써 남쪽으로는 일본을 견제할 수 있었으며, 임진왜란 때 잘 드러났듯이 적어도 일본의 중원 침공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완충지대(한반도)를 명의 영향권 내에 둘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북쪽으로는 만주 일대에 흩어져 있는 허다한 여진 부족들을 서쪽(명)과 남쪽(조선)에서 동시에 제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실제로 15세기 후반에 명이 建州女眞을 치면서 조선에 몇 차례 공동 군사작전을 제의해 온³³⁾ 사실은 명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에서 조선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그런 조선이 일본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명이 군사적으로 개입한 것은 매우 당연했다. 반면에, 그런 조선의 국왕(광해군)이 후금과 직접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은 명과 조선을 축으로 한 동아시아의 명질서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후금을 대하는 조선 조정의 태도에 따라 기존의 동북아 국제질서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가시적으로 잘 보여준다.

그러데 조선의 국내 정세와 사상조류는 광해군의 정책을 받아들이기에는 너

32) 계승범, “조선 특사의 후금 방문과 明秩序의 균열,” 『한중관계 2000년: 동행과 공유의 역사』 (서울: 소나무, 2008).

33)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푸른역사, 2009), 101-113.

무 경직되어 있었다. 실제로, 광해군의 후금 정책을 지지한 조정 신료와 재야 지식인들은 거의 없었다. 광해군의 외교노선이 당시 조선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이유는 광해군의 정책이 ‘중립외교’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유와 같다. 君父(명)와 夷狄(후금)이 서로 싸우는 와중에서 臣子(조선)가 군부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고 이적과 대화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당시 조정 신료들과 양반엘리트들의 눈에는 단순한 중립이 아니라 패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해정변(인조반정, 1623) 직후에 반포된 反正敎書에 의하면, 광해군 축출의 최대 명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광해군의 背明(親後金) 행위였다.³⁴⁾ 따라서 이 정변이 반정으로 인식되는 한 그 반정의 명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조선후기 내내 배명은 가장 사악한 패륜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고, 배명과 대척점에 있는 崇明義理가 극단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실들은 명·조선 관계의 실상과 본질을 잘 보여준다. 천륜인 부자관계라는 이념으로 맺어진 명과 조선은 동아시아 질서의 현상 유지를 위해 공조했으며, 후금(청)의 팽창에 직면해서는 사실상 그 운명을 함께 했던 것이다. 조선에게 명은 단순히 이웃의 한 대국이 아니라, 유일한 上國이자 君父였기 때문이며, 지정학적으로도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 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는 거의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점을 이해할 때, 청질서 하에서도 조선이 명에 대한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北伐이니 大報壇이니 하는 尊周義理 이데올로기를 끊임 없이 재생산할 수밖에 없었던³⁵⁾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4) 계승범, “계해정변(인조반정)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 『南冥學研究』 26 (경성대 남명학연구소, 2008). 한편, 명과 후금 사이에서 광해군이 취한 정책은 흔히 ‘중립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 국제정세에서 조선의 중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광해군의 정책은 ‘중립외교’가 아니라 ‘이중외교’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속성은 사실상 친후금 정책에 가까웠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계승범, “조선시대 동아시아 질서와 한중관계: 쟁점별 분석과 이해,”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동북아역사재단, 2009), 150-152쪽 참조.

35) 계승범,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V.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라는 틀에서 조명관계의 실제와 성격을 고찰하되, 특히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 조선이 차지하던 위상의 본질을 파악하되, 명·조선 관계를 이념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먼저 명·조선 관계에 실제로 적용되던 국제외교 관련 용어들의 용례와 의미를 고찰했다. 또한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확고해진 명·조선 관계의 성격을 춘추의리의 보편성과 절대성에 중점을 두어 분석했다. 아울러,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명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 시각에서 조망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른바 명질서가 16세기를 전후해 200년 이상 별다른 문제없이 작동하고 유지될 수 있었던 본질적 구조 및 그 질서가 17세기에 들어서며 붕괴되는 이유를 흔히 알려진 후금(청)의 흥기보다는 조선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설명했다.

북경이 주도한 조공책봉의 실제 운용과 성격이 문자적인 의미에 가장 근접했던 사례는 명·조선 관계였다. 명과 조선이 책봉과 조공을 서로 수용하고 긴밀하게 연합했던 일차적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컸던 다른 시대나 지역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동기 때문이었다.³⁶⁾ 명이 조선의 국왕을 책봉한 동기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었듯이, 조선의 동기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의 정치에서 명을 상대로 한 외교접촉이 매우 중요했던 이유는 거대 제국의 주변에서 국가의 안위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함은 아니었다.

이념적으로는 명과 조선이 엄격한 군신·부자 관계로 맺어졌고, 또한 앞에서 內服이나 階臣 등 여러 용어들의 쓰임새 분석을 통해 확인했듯이, 조선의 지배엘리트들 스스로도 명·조선 관계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중시했다. 따라서 명·조선 관계를 양국의 관계 차원에서만 보면, 명을 독립변수로, 조선을 종속변수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국제질서라는 차원에서 보면, 명·조선 관계는 결코 명이 일방적으로 형성하고 주도한 관계가 아니었다. 마치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36) Seung B. Kye, "Huddling under the Imperial Umbrella: A Korean Approach to Ming China in the Early 1500s," *Journal of Korean Studies*(2010) Vol. 15, No. 1.

소리가 나듯이, 오히려 조선의 선택과 호응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관계요, 질서였다.

이는 몽골의 위협에 늘 시달리던 명이 만주 일대의 여진과 해외의 왜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조선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으로서도 여진과 왜는 국가의 안위에 큰 불안 요인이었으므로 명과 이해관계를 공유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하고자 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여진과 왜가 강력한 통일세력을 구축하지 못하던 15-16세기에도 명과 조선은 거의 늘 공조체제를 유지했다. 여진에 대해서는 공동 군사작전을 두 차례나 전개했으며, 북경과 직접 관계망을 형성할 수 없었던 일본 서부지역의 독립적 정치세력들에 대해서는 조선의 국왕이 스스로 중심(center)이 되어 그들을 조선식 조공책봉체제로 흡수함으로써, 그들을 느슨하게나마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끌어들이었던 것이다.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 환경으로만 보아도, 대륙에서 바다로 길게 튀어나온 한반도의 조선은 중원의 명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질서의 이런 성격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걸쳐 일본과 만주에서 통일세력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임진왜란 때 명이 군사 개입을 통해 조선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요동전쟁(1618-1622) 및 그 이후 지속된 후금(청)의 팽창 과정에서 명이 지속적으로 조선에 대해 군사·외교적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절박하게 촉구한 이유도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광해군이 펼친 친후금 정책이야말로 이른바 명질서의 성쇠에 있어서 조선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된다. 다른 말로, 조선의 호응이 없는 명질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6-17세기의 동아시아를 말할 때 단순히 명이나 후금(청)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조선의 역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당시 동아시아 질서를 논할 때 적어도 조선을 주변화한 상태에서는 논제에 적절히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요컨대, 이른바 명질서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16세기를 중심으로 그 전후로 200년이 넘도록 별다른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었던 본질적 구조 및 그 질서가 17세기에 들어서며 서서히 붕괴되는 이유를 흔히 알려진 후금(청)의 흥기라는 독립변수 못지않게 조선의 선택과 역할에도 중점을 두어 새

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 ▶ 논문 접수일 : 2012년 03월 15일
- ▶ 논문 심사일 : 2012년 04월 25일
- ▶ 논문 게재일 : 2012년 05월 08일

초록

16-17세기 明·朝鮮 관계의 성격과 조선의 역할

계 승 범

이 글에서는 그동안 대개 自國史 내지는 一國史 중심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던 한중관계 연구의 틀을 벗어나 동아시아라는 전체 틀에서 16-17세기 明·朝鮮 관계의 실제와 성격을 고찰하고, 특히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 조선이 차지하던 위상의 본질을 이념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핀다. 먼저, 17세기 이전 明·조선 관계의 실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동시대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 통용되었고, 明·조선 관계에도 실제로 적용된 국제외교 관련 용어들의 사용례와 의미를 고찰한다. 또한, 明·조선 관계의 성격이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유교적인 가치로 이념화되면서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가치로 변하는 현상을 유교의 義理 문제와 관련해 분석한다. 이런 바탕 위에, 당시 동아시아 질서를 명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 시각에서 조망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어도 동아시아 무대에서 조선의 호응이 없는 명질서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명질서가 16세기를 전후한 200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었던 본질적 구조 및 그 질서가 17세기에 들어와 붕괴되는 이유를 흔히 알려진 후금의 흥기보다는 조선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새롭게 설명한다.

□ 주제어 : 명질서, 속국, 번국, 춘추의리, 중화

Abstract

The Nature of the Ming-Chosŏn Relations in the 1500s-1600s

Kye, Seung B.

With emphasis on the place of Chosŏn under the so-called Ming order in East Asia, this paper examines the features of Ming-Choson rel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ast Asian world from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It first examines some diplomatic terms that were applied to Ming-Choson relations of the time, such as naesok(來屬), kimi(羈縻), oeguk(外國) and, chungoe(中外), to name a few, and subsequently argues that to the Ming, Chosŏn was always a oeguk (foreign state) that was not included in the chungoe (within and without) under the Ming sovereignty. This paper also provides a remarkable change in the nature of Ming-Choson relations in the 1500s. In the 1400s, sadae(事大), which means serving a bigger country, inferred a sort of utilitarian and contractual relations with the Ming, implying that the suzerain state could be replaced anytime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the 1500s, however, this concept began to change to unconditional relations based on Confucian moral values in which the Koreans viewed the Ming as a ritual father as well as the suzerain. This paper also posits anew interpretation that the so-called Ming order would never have been possible without geopolitical support from Chosŏn.

□ Key words : Ming order, tributary state, vassal state, serving China, Zhonghua

참고 문헌

『宋史』(臺北: 鼎文書局, 1991).

『豫章學案』, 『宋元學案』(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3).

『栗谷全書』

『조선왕조실록』

『重峯先生文集』

『退溪全書』

『鶴峯先生文集』

『後漢書』

계승범. 2006. “과병 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對明觀의 변화”. 『大東文化研究』. 제53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_____. 2008a. “조선 특사의 후금 방문과 明淸의 균열”. 서강대학교 동양사학 연구실 편. 『한중관계 2000년: 동행과 공유의 역사』. 서울: 소나무.

_____. 2008b. “계해정변(인조반정)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 『南冥學研究』 제26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_____. 2009a. “조선시대 동아시아 질서와 한중관계: 쟁점별 분석과 이해.” 동북아역사재단 편.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09b. “조선후기 중화론의 이면과 그 유산: 명·청 관련 호칭의 변화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제19호.

_____. 2009c. 『조선시대 해외과병과 한중관계』. 서울: 푸른역사.

_____. 2011a. “鄉通事 河世國과 조선의 선택: 16-17세기 한 女眞語 통역관의 삶과 죽음.” 『만주연구』. 제11호. 만주학회.

_____. 2011b.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_____. 2012. “조선시대 의병의 개념과 임진의병.” 『西江人文論叢』. 제33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구도영. 2006. “중종대 사대인식의 변화: 大禮議에 대한 別行 倂見 논의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62호. 한국역사연구회.
- 구선희. 2009. “근대 한중관계사의 연구경향과 쟁점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편.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금장태. 2000. 『한국의 선비와 선비정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한규. 1988. “한대의 천하사상과 羈縻之義” 『中國의 천하사상』. 서울: 민음사.
- 손승철. 2006.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교린관계의 허와 실』. 서울: 경인문화사.
- 최소자. 2005. 『淸과 朝鮮: 근대 동아시아의 상호 인식』. 서울: 혜안.
- 한명기.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 Kye, Seung B. 2010. “Huddling under the Imperial Umbrella: A Korean Approach to Ming China in the Early 1500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5, No. 1. Society for Korean Studies.
- Robinson, Kenneth R. 2000. “Centering the King of Chosŏn: Aspects of Korean Maritime Diplomacy, 1392-1592.”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9, No. 1.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 Yang, Lien-sheng. 1968. “Historical Notes on the Chinese World Order”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